

신흥평화의 개념적 탐구:

'창발(emergence)'의 시각에서 본 평화연구의 새로운 지평

김상배*

논문 요약

이 글은 평화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차원에서 '신흥평화(emerging peace)'의 개념을 탐구하였다.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로 대변되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직면하여, 최근 안보 분야에서는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도입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평화연구는 여전히 전통적 시각에만 머물러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실제로 탈냉전 이후 평화연구는 팔목할만한 이론적 혁신을 이루지 못한 채 다소 정체된 감이 없지 않다. 안보연구 분야 못지않게 평화연구 분야에서도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새롭고도 적극적인 연구를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복잡계 이론(Complexity Theory)의 시각, 특히 '창발(創發, emergence)'의 개념을 원용하여 신흥평화의 개념을 세 가지 차원에서 탐구하였다. 첫째, 신흥평화는 전통안보가 아닌 '새로운(new)' 분야, 특히 '신흥안보 분야'에서 거론되는 평화를 의미한다. 둘째, 신흥안보 분야의 평화는 전통적인 평화연구가 상정했던 '정태적 상태'의 개념이 아니라 정중동(靜中動)과도 같은 '동태적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 개념이다. 끝으로, 신흥평화는 안보위협에 대해서 환원적 제어를 부과하는 상호작용, 즉 자기조직화의 메커니즘에서 생성되는 '항상성(恒常性)'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한 신흥평화는 '창발'의 다의성에 주목한 개념설정으로 각기 분리된 양상이라기보다는 서로 중첩되는 복합적이고 축차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신흥평화 개념의 '삼면성(trinity)'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실증주의 과학철학에 기반을 둔 단순계적 인식론을 넘어서는 노력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날 안보현실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흥평화의 실천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평화연구, 신흥평화, 신흥안보, 복잡계 이론, 창발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https://doi.org/10.18854/kpsr.2023.57.1.009>

I. 머리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대규모 자연재해, 사이버 안보, 신기술 안보, 인구·이민·난민 안보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양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들 이슈가 복잡하게 연계되면서 예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안보위협·부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러한 안보위협·부상의 발생에 직면하여 국내 학계에서도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의 개념을 내세워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상배 편 2016; 2021; 김상배·신범식 편 2017; 2019). 이 글은 이러한 신흥안보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차원에서 ‘신흥평화(emerging peace)’의 개념을 탐구하고자 한다. 안보연구는 새로운 시각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평화연구는 여전히 전통적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새로운 안보연구의 지평을 열어간다고 하면서 평화를 보는 시각을 ‘전통평화론’의 테두리 안에만 가둬 두는 것은 아닐까?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만큼, 평화의 개념도 확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신흥안보 연구와 짝을 맞추는 차원에서 신흥평화의 개념을 탐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평화’의 사전적 정의는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이나 분쟁 따위가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이다(표준국어대사전).¹ 신흥평화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 정의를 넘어서 새로운 평화론을 모색하려는 문제제기이다. 단순히 ‘전쟁 없는 평온한 상태’라는 시각으로만 평화를 이해해서는 오늘날 복잡다단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평화의 난제를 제대로 풀기 어렵다. 전쟁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우리 삶의 평화를 해치는 요인들은 너무나도 많아져서, ‘평온한 상태’를 준거로 평화를 추구하려는 소극적 차원의 노력만으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은 요원한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평화를 모색하는 방식도, 거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분쟁에 대한 국가적 개입 이외에도, 미시적 차원의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도 포괄해야 한다. 그야말로 안보 분야 못지않게 평화 분야에서도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평화론과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통적 평화 개념을 넘어서려는 학계의 시도가 이전에도 있었음은 물론이다(김병곤 2020). 그중에서도 평화를 ‘전쟁의 부재(不在)’로만 보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의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에 대한 논의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Galtung 1967; 1996; Webel and Galtung 2007).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통해서 ‘구조적·상징적 폭력의 부재 상태’를 강조한 갈통의 시각은 평화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양한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다(Boulding 1977; Galtung 1987; 정천구 2011). 그러한 과정에서 갈통의 평화론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려는 평화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이보다는 좀 더 진취적으로 신흥안보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평화연구를 펼칠 필요가 있다. 안보연구가 배리 부잔(Barry Buzan)으로 대변되는 ‘국제안보의 코펜하겐 학파’의 문제제기로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고, 오늘날의 신흥안보 연구에까지 진화해 온

¹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검색일: 2023.02.22.)

것을 새롭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Buzan 1997; Beck 2005).

물론 탈냉전 이후의 평화를 포괄적인 시각에서 탐구한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Senghaas 2013; Diehl 2016; 이동기 2013). 그럼에도 갈등의 연구나 그 비관자들의 평화연구는 여전히 평화의 문제를 거시적 구도에서 설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미시적이고 동태적 현상을 특징으로 하는 신홍안보 분야의 평화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 신홍안보 분야에서도 ‘사이버 평화’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주제 중의 하나이다. 사이버 평화는 기존 평화연구에서 상정하는 거시적 차원의 ‘폭력의 부재’로만 이해할 수 없는 논제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극복하는 ‘보건·생태평화’의 논제도 평화연구가 시급히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이다. 전쟁이 없어 평온해 보이는 상태이지만, 팬데믹이 창궐하여 삶이 어지러운 상황을 ‘평화’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거시적 차원에서 평화를 보는 기존의 시각만으로는 안보위협이 미시적 차원에서 발생해서 거시적 차원으로 떠오르는 신홍안보 분야의 평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전통 평화론의 시각에서 보면 사이버 평화나 보건평화와 같은 주제는 평화를 거론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냥 ‘수면 아래의 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신홍안보의 시대에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상태일 지라도 그 이면에서는 계속 갈등을 생성하는 동태적 과정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평화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동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글은 복잡계 이론(Complexity Theory)의 시각을 원용하여 새로운 평화의 개념을 탐구할 것을 제안하였다(페르 박 2012). 특히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창발(創發, emergence)’의 개념이다(존슨 2004). 이 글은 자연과학계의 관행을 따라서 ‘emergence’를 ‘창발’로 번역하였는데, ‘emergence’가 ‘안보’나 ‘평화’와 합성되어 형용어인 ‘emerging’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신흥(新興)’으로 번역하여 ‘신홍안보’ 또는 ‘신흥평화’로 칭하였다. 이 글이 탐구하는 ‘신흥’과 ‘평화’의 합성어로서 ‘신흥평화’의 개념은 새로운 평화연구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문제 제기이다.

특히 창발의 개념을 통해서, 기존의 소극적 평화론뿐만 아니라 갈등이 말하는 적극적 평화론의 경계도 넘어서고자 하였다. 사실 ‘단순계 구조’의 프레임에 기반을 둔 갈등의 평화론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적 변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갈등 평화론의 복잡계 버전을 추구한다면 그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질서가 창출되는 과정으로서 창발이라는 생성적(generative) 관점에서 갈등이 제기한 소극적 평화나 적극적 평화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한가? 다시 말해, 창발의 과정처럼 평화는 자연발생적으로 저절로 출현하는 ‘소극적 과정’인가? 아니면 평화는 특정 주체의 의도적 개입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역(逆)창발’의 ‘적극적 과정’인가? 정리하면, 창발의 개념적 구도에서 새로운 안보위협의 발생과 평화를 위한 노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 제기에 직면하여 이 글은 궁극적으로 진화론적 맥락에서 신흥평화에 대한 탐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펼쳤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신흥평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흥평화는 전통안보가 아닌 ‘새로운(new)’ 분야, 특히 ‘신홍안보 분야의 평화’를 의미한다. 이는 ‘새롭다’는 뜻의 ‘신생성(新生性)’을 의미하는데, ‘신흥’에서 ‘신(新)’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시각을 취하는 경우 쟁점은 새로운

분야의 속성에 부합하는 ‘평화’ 개념이 무엇이나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관여하는 주체의 복잡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논제이다. 둘째, 신홍평화는 ‘정태적 상태’가 아니라 ‘동태적 과정’으로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다. 이는 복잡계 맥락에서 이해한 ‘동태성(動態性)’을 의미하는데, ‘신홍’에서 ‘홍(興)’에 해당한다. 이 시각을 취하는 경우 쟁점은 ‘실체’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인식론의 적극적 도입이다. 특히 창발의 개념적 구도를 원용하여 평화의 개념을 일종의 ‘동태적 상태’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논제이다. 끝으로, 신홍평화는 위협의 창발에 대해서 환원적 제어를 부과하는 자기조직화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창발과 피드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항상성(恒常性)’을 의미한다. 이 시각에서는 ‘신홍’과 ‘평화’ 개념 각각을 살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입체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쟁점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보면 신홍평화론은 좀 더 나은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적 개입을 통한 복원과 조화 및 공진의 진화론적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신생성과 동태성, 항상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한 신홍평화는 ‘창발’의 다의성에 주목한 개념설정으로 각기 분리된 양상이라기보다는 서로 중첩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신생성과 동태성, 항상성의 양상은 축차적인 과정이다. 다시 말해, 실재론의 시각에서 본 신홍평화는 ‘신생성’을 지닌 평화이고, 과정론의 시각에서 본 신홍평화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동태성’이며, 진화론의 시각에서 본 신홍평화는 안보위협에 대해 환원적 제어를 가하는 ‘항상성’의 메커니즘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신홍평화의 개념은 ‘실체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메타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신생성과 동태성, 항상성이 기존 연구에서도 탐구했던 차원이라면, 신홍평화론은 이 셋을 묶어서 보는 복합적 ‘삼면성(trinity)’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이렇게 신홍평화 개념의 복합 프레임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실증주의 과학철학에 기반을 둔 단순계적 인식론을 넘어서는 노력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신홍평화의 개념적 탐구는 복잡계의 발상에 기원을 두는 탈(脫)실증주의(Post-Positivist) 인식론을 기반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Jackson 2011; Dunne, Hansen and Wight 2013; Bennett 2013; 김상배 2014, 172-177).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새로운 이슈’로서 신홍평화 개념을 탐구하였다. 새로운 안보 분야로서 신홍안보 분야에서 거론되는 평화의 개념과 함께 주요 신홍안보 분야의 경험적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출현하는 신홍평화 주체의 복잡성도 중요한 탐구주제이다. 제3장은 ‘동태적 과정’으로서 신홍평화 개념을 탐구했다. 정중동(靜中動)으로서 신홍평화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수면 아래의 동태성을 평화 개념의 설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미시-거시 창발의 구도에서 보는 ‘하이브리드 평화(hybrid peace)’와 ‘평화 연속체(peace continuum)’ 등의 개념도 살펴보았다. 제4장은 ‘항상성 유지’로서 신홍평화 개념을 살펴보았다. 신홍평화를 의도적 개입을 통한 적극적 평화의 구현이라는 맥락에서 설정하고 안보위협 창발과 엔트로피 증가에 대한 네거티브 피드백으로서 신홍평화 개념을 제시했다. 끝으로, 맺음말에서는 이 글의 논의를 종합·요약하고, 향후 좀 더 적극적으로 신홍평화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Ⅱ. ‘새로운 이슈’로서 신흥평화

1. 신흥안보 분야의 평화

새로운 안보위협이 제기되는 신흥안보 분야에서도 ‘전쟁이나 분쟁 따위가 없이 평온한 상태’로서 평화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흥이슈이기 때문에 신흥평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단순 논리는 넘어서야 한다. 전통이슈가 아니라 신흥이슈라는 ‘이슈의 신생성’ 자체가 새로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전통적인 폭력의 논리는 작동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신흥안보 분야에서 평화의 논의도 기본적으로 그 출발선에서는 ‘폭력의 부재’라는 소극적 평화의 잣대를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신흥안보 분야에서는 이슈의 성격에 따라서 그 ‘폭력의 부재’라는 것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사전적 의미로 ‘사납게 몰아붙이는 힘’으로서 폭력(暴力)은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흥안보 분야에서 평화가 문제시되는 폭력의 문제는 기술 시스템이나 악성코드의 폭력, 생물학적 바이러스의 폭력, 기후변화를 바탕으로 한 지구환경 시스템의 폭력 등과 같은 ‘신흥폭력(emerging violence)’을 상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분야, 즉 신흥안보 분야의 평화라는 시각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례는 신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경제안보, 보건안보, 환경·에너지 안보, 인구·이민·난민 안보 등이 제기하는 위협과 여기서 파생되는 갈등 해소의 문제와 관련하여 발견된다. 실제로 첨단 신기술 분야의 군비경쟁, 사이버 공격의 양적 증가와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국제분쟁, 초국경 난민을 둘러싼 국내의 갈등과 같은 문제들은 전통안보 분야에 못지않게 복잡한 분쟁 해결 및 평화 모색과 관련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이들 분야의 폭력 해소와 평화 달성 문제는 각 이슈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분야마다 각기 쟁점으로 제기되는 평화의 개념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고유한 성격과 작동방식을 구체적으로 구별해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기술 안보 분야에서는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을 놓고 거론되는 이른바 ‘디지털 평화(digital peace)’가 쟁점이다(Garcia 2018). 다시 말해, 자율살상무기, 드론, 로봇, 극초음속 미사일, 양자기술 등의 무기화가 제기하는 갈등과 평화의 이슈이다. 이 분야의 갈등과 평화는 국가 행위자들이 나서서 기존 국제정치의 테두리 내에서 벌이는 군비경쟁 및 군비축소의 게임과 연동된다. 다만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무기 등과 같은 신기술이 관련된다는 점이 새롭다. 이러한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출현한 신기술 역량의 불균등한 발전은, 핵무기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평화질서를 와해시킬 정도의 잠재적 파괴력을 지닌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물론 AI기반 신기술이 디지털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드론과 같은 기술은 테러 집단이 활용하기도 하지만, 평화유지 활동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신기술이 전쟁과 평화에 양면적인 함의를 던지는 대표적 사

레이다(Flynn 2021).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는 이른바 ‘사이버 평화(cyber peace)’가 쟁점이다(Bloom and Savage 2011; Roff 2016a; 2016b; Shackelford et al. 2022). 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사이버 안보 이슈는 기본적으로 비국가 행위자나 기술 자체가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는 참여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이버 평화의 개념 자체도 다양하다. 여태까지의 양상을 보면, 시스템 교란이나 랜섬웨어 공격 등이 없는 상태는 사이버 평화를 달성하는 핵심으로 이해된다. 데이터·정보의 절취뿐만 아니라 데이터 안보와 데이터 주권, 데이터 국지화 등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사이버 평화로 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뉴스 생산과 확산, 그리고 여기서 비롯되는 심리적 갈등과 사회 분열의 조장 및 민주주의 체제의 훼손 등도 사이버 평화를 해치는 요인으로 인식된다.

보건안보 분야에서는 이른바 ‘보건·생태 평화’가 쟁점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존 글로벌 보건질서의 불안정이 논란거리가 되었다. 강대국들의 갈등과 리더십의 실종, 자국중심주의 경향의 대두, 백신 개발의 불균형성과 공급망의 불안에서 나타난 문제 등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도 낳았다. 그야말로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이 국제질서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평화를 침해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발생은 인간 생명에 대한 바이러스의 위협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본 삶의 평화를 교란한 사건이기도 했다. 게다가 보건안보 문제가 지구온난화나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글로벌 환경 문제와 연계되면서 존재론적 평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상의 사례에서 주목할 것은, 디지털 평화, 사이버 평화, 보건·생태 평화의 스펙트럼을 따라서 분야별로 신홍안보 위협의 발생과 관련 행위자들의 갈등 구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강조컨대, 신기술 안보 분야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국가 행위자들 간의 갈등이 기술을 매개로 해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안보 분야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새로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가운데 국가 행위자들 간의 전통적인 갈등도 점점 더 고조되는 추세이다. 이에 비해 보건안보 분야의 갈등은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비인간(non-human) 행위자까지도 개입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더 복잡한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각 분야 신홍안보 위협이 지닌 고유한 성격과 이에 관련하는 행위자들의 생애적 성격 간에 형성되는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슈별 성격 및 관련 행위자들의 갈등 구도가 다른 만큼, 그 분야에서의 제도와 규범 형성, 그리고 더 나아가 평화 모색의 양상도 다르다. 사이버 안보의 경우에는 사이버 평화를 위한 제도와 규범 형성에 있어 서방과 비서방 진영 간의 견해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두드러진다. 신기술 분야를 보면, 우주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구도가 나타나고, AI를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진영과 글로벌 시민사회 그룹의 대립이 두드러진다. 자연발생적 성격을 지닌 지구온난화나 감염병의 경우에는 안보위협과 과급효과가 광범위한 것만큼 다양한 행위자들이 의견대립을 보인다. 한편, 난민 문제의 경우 국제기구가 주요 행위자로 활동하면서 난민기구와 난민협약과 같은 협력과 공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일찍부터 발전되어 왔으나, 유럽 난민 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에의 적용에 제한이 있어, 여전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가 행위자들 간의 갈등이 주가 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이슈’로서 신흥평화에 대한 논의에서 주목할 것은, 이들 신흥안보 분야가 점점 더 서로 밀접히 연계되면서 그 갈등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안보위협적 영향도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사이버 안보 분야를 보면, 최근 사이버 공격의 양상은 해킹을 통한 시스템의 교란을 넘어서 첨단기술과 데이터의 절취, 랜섬웨어 공격과 암호화폐 해킹, 공급망의 교란, 사이버 공간의 정보심리전 또는 인지전의 전개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슈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경제안보, 그중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 문제이다. 다양한 이슈들이 양질전화와 이슈연계의 단계를 거쳐서 지정학적 차원에서 평화를 해치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흥안보 분야의 평화 이슈가 전통안보 분야의 평화 이슈와도 밀접히 연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듯 안보 분야가 확장되면서 평화의 이슈도 확장되고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2. 신흥평화 주체의 복잡성

신흥안보 분야의 평화에 대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갈등과 분쟁 해결의 주체 또는 평화를 모색하는 주체의 문제이다. 현재 신흥안보 분야 평화의 모색은 주로 강대국으로 대변되는 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강대국 위주의 신흥평화 구축 시도는 한계가 있다. 최근 전개된 사이버 안보 분야의 양상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가 간 평화’가 ‘사이버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절감케 한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 미중 정상 사이 사이버 안보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사이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양국의 사이버 공방이 더욱 증가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2021년 7월 미러 정상이 만나서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에 공감했음에도 러시아 해커들의 공격을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했음도 알려진 사실이다.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유엔 정부자문가그룹(GG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의 프레임워크도, 정부 대표가 나서는 국제기구의 틀에 기대어서는 사이버 안보 분야의 논란거리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강대국이 아닌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 모색을 위해서 유엔 차원에서 출범한 개방형위킹그룹(OEWG: Open-ended Working Group)은, 기존의 유엔 GGE 모델을 넘어서, 정부 및 민간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복합 프레임워크의 실험이다.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 커졌는데, 유럽에서 나타난, 에스토니아나 핀란드 등과 같은 나라들의 행보는 유럽연합 차원의 지역협력체와 연동하여 사이버 평화를 모색한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이버 평화를 위한 민간 기업들의 활동도 시선을 끄는데,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제네바 협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의 행보는 2018년 11월 파리평화포럼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와 세계 주요국들, 그리고 218개 컴퓨터 관련 기업과 93개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결실을 본 ‘사이버 공간의 신뢰와 안보를 위한 파리의 요구’, 즉 ‘파리 콜(Paris Call)’을 낳았다.

신홍평화 주체의 복잡성은, 신기술 안보 분야에서 기술 변수 그 자체에 행위자로서의 자율성을 얼마나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에서도 발견된다. 최근 쟁점이 된 것은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제어하고 책무성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AI 알고리즘을 평화적으로 설계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AI 기반 자율살상무기의 국제규범이나 킬러로봇 윤리 등에 대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간의 입장 차가 엄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평화’의 정의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방법과 관련된 인식의 차이도 여전히 큰 것이 현실이다. 궁극적으로 이 분야의 신홍평화는 인간이 아닌 ‘기계’에 ‘포스트 휴먼(post-human)’ 또는 ‘신홍 휴먼(emerging human)’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얼마나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포스트 휴먼 평화’도 신홍평화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신홍평화에 대한 논의는 ‘인간 대 인간’의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인간 대 비인간(non-human)’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도 아우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홍평화는 탈근대적 공존이라는 맥락에서 인간의 ‘실존적 평화’ 문제로도 연결된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생은 ‘인간 중심주의(ethnocentrism)’를 넘어서 지구 생명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거론해야 할 당위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은, 인간과 인간의 초연결성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 그리고 생태 환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당면한 안보와 평화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함을 인류에게 각인시켰다. 사실 코로나19는, 인간 행위자에게는 커다란 존재적 위협이지만, 자연 시스템의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지구가 생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홍안보 분야에서 강대국 중심의 평화 모색이 드러낸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견국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시민 단체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의 참여, 그리고 심지어는 비인간 행위자의 주체성에도 주목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신홍안보 분야의 평화 모색 과정에서 기존의 국가 행위자가 완전히 물러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예전처럼 강대국들이 나서서 평화를 주도하는 모델을 상정할 수는 없더라도, 국가 행위자 자체는 여전히 여타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에서 ‘중심성(centrality)’을 제공하고 ‘메타 거버넌스(meta-governance)’의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의 역할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하영선·김상배 편, 2006). 이러한 역할은, 제4장에서 살펴볼, 항상성의 유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주체로서 속도조정자(pacemaker)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존슨 2004).

Ⅲ. ‘동태적 과정’으로서 신흥평화

1. 정중동(靜中動)의 ‘동태적 상태’

전통적인 평화론은 평화를 ‘전쟁이나 분쟁 따위가 없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즉 ‘정태적 상태’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흥안보 분야의 평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상태일지라도 그 이면에서는 계속 갈등이 발생하는 ‘동태적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상태로 보이는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내부의 노드들은 부단히 상호조절의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동태적 시각에서 평화를 보면, ‘수면 위의 평화’만 관리한다고 ‘수면 아래의 평화’가 저절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지를 펼치게 된다. 거시적 차원에서 ‘대로변(大路邊) 평화’만 논할 것이 아니라 미시적 차원의 생활 속, 즉 ‘뒷골목 평화’도 논해야 한다. 수면 아래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백조의 물 갈퀴질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일종의 정중동의 상황이라고 할까?

사이버 안보 분야의 평화는 이러한 수면 아래 평화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물리적 전쟁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감행되고 있는 상황을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행되는 사이버 공격은 거시적 평화를 깨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을 겨냥하여 양국 간의 실제 전쟁 발발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 해커들이 지속적으로 미 정부기관이나 민간시설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가하고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함으로써 미국의 정치사회 시스템을 교란하는 상황을 궁극적으로 양국 간의 전통평화를 해치는 행위로 인식한 결과였다. 아무리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미시적 행위라도 이를 거시적 차원의 전통평화를 해치는 행위에 준해서 대응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였다. 전통안보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지 않은 평화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사이버 평화가 전통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연계의 뇌관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보건안보 분야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전쟁이 발생해서 전통적인 의미의 평화가 깨진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밖에 나갈 수 없어 거리가 조용해진 상황을 ‘평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염병으로 인해 거리가 너무 ‘평화로워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이러한 사태가 국내적으로 경제적 불황을 야기하고, 국가 간에는 통상마찰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잠재성을 지닌 감염병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거시적 평화를 해치게 되는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는 양질전화와 이슈연계의 사다리를 타고 창발하여, 글로벌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쟁도 없고 거리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황이었으나, 신흥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일상의 삶이 평화롭지 못하다면 결코 이를 평화롭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궁극적인 평화는 질병이 우리 삶을 어지럽게 하지 않고 모두 건강하게 사는 상태도 포함하게 된다.

강조컨대, 신홍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평화만 봐서는 안 된다. 이른바 ‘미시-거시 연계성’이 커졌기 때문에, 미시적 평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놔두면 그것이 나중에 거시적 전통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수면 아래에서 제기되는 신홍안보 위협을 평화의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보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갑자기 거시적 평화도 깨질지 모른다. 그 속성상 신홍안보 위협은 아래로부터 창발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라도 대비하는 동태적이고 미시적인 평화의 발상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미시적 평화는 어떻게 되더라도 거시적 평화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평화를 논했다면, 이제는 안보위협이 언제 창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전처럼 문제를 정태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동태적 창발의 마인드로 평화 개념을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 동태성의 산물로서 하이브리드 평화

‘동태적 과정’으로서 신홍평화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발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존슨 2004). 창발은 거시적 차원의 통일된 법칙과는 상관없이 미시적 차원의 국지적 규칙만 따르는 다수 행위자의 복잡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생성된다. 창발은 자기 자신을 조직하여 무의식중에 더 높은 차원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개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창발의 과정에서 유의할 것은, 거시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미시적 요인들이, 아무리 유사하다 하더라도, 상황적 차이의 민감성으로 인해 거시적 차원에서 항상 동일한 현상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른바 ‘비선형적 동태성’이다. 신홍안보의 개념은 이러한 ‘비선형적 동태성’의 속성을 지닌 창발의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안보위협의 발생을 이해한다. 이러한 창발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평화도 이해하지는 것이 신홍평화의 개념이다. 물론 신홍평화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신홍안보 위협이 창발하는 메커니즘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창발하고 있는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의 구도를 전제로 해서 신홍평화를 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논의의 기반을 공유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신홍평화의 개념은, ‘양질전화-이슈연계-국가안보’의 세 단계를 따라서 창발하는 신홍안보 위협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김상배 편 2016). 양질전화의 관점에서 볼 때, 미시적 차원의 안보위협으로 인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아무리 ‘태평성대’라고 할지라도 그 의미는 무색할 수밖에 없으므로 잘 대비해야 한다. 이슈연계라는 관점에서도 어느 특정 분야의 안보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다른 분야의 평화를 해치는 데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안보위협이 거시적 차원의 지정학적 갈등을 유발할 정도로 창발하지 않도록 협력할 필요성도 강조된다.

이러한 평화의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은 예전의 단순계 세상에서는 그리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오늘날과 같은 복잡계 세상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평화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큰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시적 안보위협이 계속 제기되더라도, 이에 잘 대응하기만 하면 일정한 범위에서는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축구 경기의 전술에 비유해 보면, 마치 상대방의 공격이 중앙선을 넘어오기 전부터 펼쳐지는 ‘전방 압박’의 수비 전술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흥평화는 미시적 평화의 모색을 통해서 거시적 평화의 달성을 도모하는 ‘동태적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다.

반복해서 강조컨대, 평화는 ‘상태 개념’이 아니라 ‘과정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고정된 사진처럼 보이는 ‘정태적 평화(static peace)’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영상과도 같은 ‘동태적 평화(dynamic peace)’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신흥안보 분야에서는 완벽하게 평화로운 상태는 없을 수도 있다. ‘깔끔한 평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저분한 평화’라는 시각을 도입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다시 말해, 신흥안보 분야에서는 소극적 평화론에서 말하는 ‘깔끔한 평화’의 마인드를 적용하여 ‘전쟁이 부재한 상태’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좀 더 복잡한 평화, 즉 위협과 평화가 공존하는 양상, 즉 ‘위태로운 평화’에 주목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극적 평화론에서 본 사이버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한 디지털 환경이나 해킹 시도가 없는 무결의 상태를 꿈꾸겠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오류와 취약점이 없는 프로그램이 없고, 따라서 해킹 시도가 그칠 날이 없다. 보건안보 분야의 경우에도 질병이 우리 삶을 어지럽게 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를 모두가 바라지만, 그와는 달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사는 세상이란 꿈꾸기 어렵다.

신흥평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평화와 분쟁의 어느 한쪽이 아니라 그 양자가 동태적으로 섞이는 방식과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동태성의 산물은 일종의 ‘하이브리드 평화(hybrid peace)’라고 할 수 있다(Richmond 2014; Bargués-Pedreny and Randazzo 2018).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안정적 상태로서의 평화, 즉 ‘안정적 평화(stable peace),’ 또는 전쟁에서 평화로 이르는 일종의 ‘평화 연속체(Peace Continuum)’라고 불러 볼 수 있다(Kupchan 2010; 이상근 2015). 사실 인류의 역사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평화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어떠한 상태가 정말로 평화적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평화 개념을 ‘전쟁’과 명시적으로 구별되는 어떤 상태로 이해하기보다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의 구도에서 전쟁과 평화를 보는 것은 유용한 시도이다. 사실 평화의 ‘이념형’이라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것은 ‘전쟁’의 발생을 제어하면서 ‘평화’를 달성해 나가는 끊임없는 ‘과정’인데, 아마도 이것이 평화의 ‘현실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목표로 삼는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종식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과 ‘조건’을 줄여 나가는 동태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시각에서 볼 때, 사이버 평화는, 완벽하게 깨끗할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버그가 있어 관리될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 평화 또는 ‘평화 연속체’의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최근 글로벌 공급망 안보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상호의존의 무기화’ 메커니즘을 아는 것도 하이브리드 평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기화된 상호의존 상태는 평화 상태도 아니고 분쟁

상태도 아닌 복합상태이다. 상호의존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한 상호의존의 상태를 상대방이 무기화하도록 방지하면 평화를 해칠 것이 뻔해서 일정 정도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 상태이다. 이렇듯 정태적 상태가 동태적 과정과 공존하는 현상, 즉 ‘동태적 평화’가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그 이면에서 불안정 상태에서부터 안정 상태를 추구해 가는 힘, 즉 항상성 유지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다.

IV. ‘항상성 유지’로서 신흥평화

1. 의도적 개입과 적극적 평화의 지향

신흥평화라는 말에서 ‘신흥’은 자연발생적 동태성을 강조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에 ‘평화’의 개념을 접맥함으로써 적극적 의도성의 요소가 가미된다. 신흥평화의 개념은 파괴된 안정과 평화의 질서를 적극적으로 재구축한다는 실천적 처방의 함의를 지니고 있다. 창발의 과정을 밟아서 발생하는 신흥안보와는 달리, 신흥평화는 자연발생적인 창발 과정만으로 구성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신흥평화는 미시적 평화를 중범위 평화와 거시적 평화로 승화시키려는 의도적 개입의 과정을 포함해서 이해해야 한다. 또는 역으로 미시적 단계에서 거시적 단계로 창발하는 신흥안보의 위협을 제어하기 위한 의도적 개입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평화는, 불안정을 발생시키는 사건이 일차적으로 발생하고 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환하는 ‘이차적 현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안보위협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이 그 위협을 제어하려는 의도성을 발현하는 차원에서 평화의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신흥 또는 창발이라는 말 그 자체는 상대적으로 인간 행위자의 행위능력(agency)이 제외된 탈(脫) 의도적 뉘앙스 또는 시스템 차원의 자체적 작동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창출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거시적인 현상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발생하는 것처럼 이해될 여지가 매우 크다. 그런데 신흥이라는 말에 평화를 결합한 신흥평화의 개념은, 창발의 자연 발생성을 넘어서, 그 창발의 과정에 인간이 개입하여 의도하는 결과를 생산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다시 더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흥평화는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적 노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창발의 구도에서 평화는 신흥이슈의 위협요인이 국가안보를 논할 정도의 수준으로 창발하여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임계점을 넘는 경우라도 이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위협요인이 더 이상 큰 안보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도에서 보면, 일종의 ‘창발의 인계철선’을 사전에 또는 사후에 끊어내는 것이 평화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신흥안보

위험이 자기조직화의 임계점(self-organized criticality)을 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신흥평화라고 할 수 있다(페르 박 2012).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똑같이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개념적 외연을 가진 ‘신흥안보 거버넌스’와 ‘신흥평화’가 지니는 개념적 내포의 차이가 무엇이나의 문제이다. 실제로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본 신흥평화는 신흥안보 거버넌스의 개념과도 통한다. 그러나 신흥안보 거버넌스와 신흥평화가 지니는 차이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신흥안보 거버넌스는 위기가 창발의 임계점을 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신흥안보 거버넌스에서는 양질전화 및 이슈연계의 고리를 끊어서 위험을 줄여나가려는 방어적 노력, 즉 소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본 ‘신흥안보의 평화’ 즉 신흥평화는 위험요인이 안보적 위협으로 창발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위기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을 갖도록 만드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질서를 개혁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신흥평화의 개념은 단순히 원상태로의 복원을 넘어서 위기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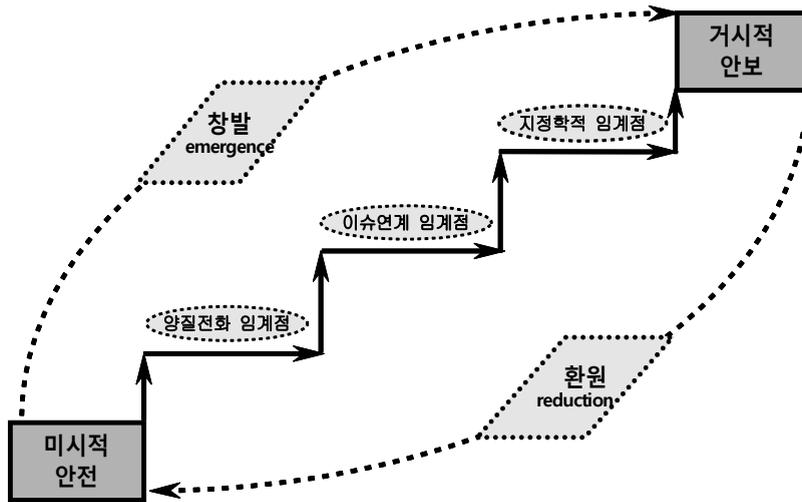
요컨대, 신흥안보 거버넌스의 논의가 기본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이슈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상적 갈등을 제거하거나 완화하여 기존 질서를 보존하지는 소극적 평화론에 머물고 있다면, 신흥평화론은 이보다는 좀 더 나아가 구조적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존 질서를 개혁하는 적극적 평화론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흥안보 거버넌스와 신흥평화의 차이는 ‘실증적 문제 해법’과 ‘규범적 가치 추구’의 차이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와 ‘평화’의 차이는 단순한 ‘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조화(harmony)’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신흥안보 거버넌스를 통해서 ‘질서’를 창출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노력이 반드시 새롭게 평화를 논할 정도의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신흥안보 위협의 발생에 대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신흥안보 거버넌스와 신흥평화의 개념이 지닌 기본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2. 위협 창발에 대한 네거티브 피드백

이상에서 살펴본 구도에서 이해하면, 신흥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은, 신흥안보 거버넌스나 신흥평화의 과정 모두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창발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화적(evolutionary)’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창발(emergence)과 환원(reduction)이 상호작용하면서 생성하는 입체적 구도에서 평화의 개념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신흥평화는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환원적 제어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평화는 창발의 영역이기보다는 의도적 개입의 영역이다. 다시 말해, 평화는 아래로부터의 현상, 즉 창발의 포지티브 피드백(positive feedback)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현상, 즉 환원의

네거티브 피드백(negative feedback)에 관여한다. 평화는 창발적 안보위협에 피드백을 가하는 ‘역(逆) 창발’의 개입과정이며, 설계자 없는 거시적 협력이기보다는 합리적 설계자의 개입으로 파악되는 실천적 노력의 결과물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평화는 ‘아래로부터의 창발’과 ‘위로부터의 환원’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 ‘아래로부터의 창발’과 ‘위로부터의 환원’



출처: 필자 작성

물론 창발적으로 달성되는 거시적 차원의 조화로운 현상으로 평화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설계자가 없는 아래로부터의 협력이라는 맥락에서 평화와 관련된 논의를 펼친 사례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집합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소셜 두뇌(social brain)’, ‘지구뇌(global brain)’, ‘정신계(noosphere)’, ‘오메가 포인트(Omega Point)’ 등에 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창발적으로 달성되는 거시적 차원의 조화와 협력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논의가 있었다(Smith 1776; Teilhard de Chardin 1955/1965; Arquilla and Ronfeldt 2001; Heylighen 2011; 레비 2002).

이러한 연구 전통에 대해서 이 글이 제기하는 질문은, 이렇듯 신흥평화를 ‘미시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설계자 없는 거시적 협력’의 결과물로만 보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이다. 오히려 실제 현실에서 창발의 과정은, 반드시 조화로운 현상으로만 가지 않고 갈등적 현상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미시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평화가 창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위협이 창발한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의 창발’과 ‘평화의 환원’이라는 구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평화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원용했던 요한 갈통과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의 논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Galtung 1967; Boulding 1977).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하면, 엔트로피 증가는 에너지의 균질성이 높아지는 상태인데, 모든 시스템에서 무질서와 무효에너지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엔트로피는 네거티브 개념이어서 이해가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잠재력’이라는 포지티브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네거티브 엔트로피(negative entropy)’ 또는 ‘네겐트로피(negentropy)’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여하튼 물리 세계에서는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 또는 ‘잠재력’과 ‘네거티브 엔트로피,’ ‘네겐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 발생한다는 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요체이다(리프킨 2015).

갈통은 이러한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대한 논의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대별되는 자신의 평화 개념에 원용했다. 갈통에 의하면,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는 행위자들이 한쪽으로, 특히 적은 수의 집중된 지위로 쏠리는 경향이 있고, 그 연결성도 소수의 행위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갈통은 이러한 상태를 소극적 평화 상태로 개념화했다. 다시 말해, 갈통은 잠재력이 높은 상태, 즉 엔트로피가 감소된 상태를 소극적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 상태로 상정했던 것이다. 이에 비해 높은 엔트로피 상태에서는 행위자들의 지위가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들 간의 연결성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갈통은 이러한 상태를 적극적 평화 상태로 봤다. 엔트로피가 늘어나서 상호 견제하는 상태가 바로 구조적 폭력이 부재한 적극적 평화의 상태라는 것이다. 갈통에 의하면, 폭력의 가능성은 엔트로피가 낮은 시스템에서 커지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시스템에서 감소한다는 것이다(Galtung 1967; 정천구 2011).

이러한 갈통의 논의에 대해서 볼딩은, 갈통이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잘못 이해하여 사회의 잠재력이 소진된 평등한 사회를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갈통의 이해 방식은 진화의 과정 전반을 엔트로피의 차별화로 보는 진화적 관점과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인류사회의 공통적인 딜레마와 비극은, 사회 시스템은 가만히 놓아두면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상태에서 더 나쁜 상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역동성’은 인간의 향상을 위해서 행해지는, 성공적인 개입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게 한다. 사물을 엔트로피가 증가하도록, 즉 잠재력이 손실되고 노화가 진행되며 무질서와 퇴행이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면, 사회와 조직은 쇠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물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Boulding 1977; 정천구 2011).

이러한 엔트로피와 평화에 대한 논의를, 앞서 살펴본 창발과 환원의 구도에 놓고 생각해 보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는 에너지가 특정 부문에 집중된 상태, 즉 잠재력의 보유 상태이며,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는 에너지가 균질화되어 잠재력이 소진된 상태이다. 이를 창발론에 대입해서 보면, 미시적 단계로부터 거시적 단계로의 창발은 집중된 힘이 균열의 조짐을 보이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창발이 거시적 단계에 이르면 특정한 패턴을 발현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웅크리고 있던 물체가 펼쳐지면서 제 모습을 드러내는 양상을 떠올려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엔트로피 증가 과정과 창발의 과정은 언뜻 보기에는 역방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양자는 포지티브 피드백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순방향의 현상이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힘을 사용하여 소모하는 내적 과정을 다룬다면, 그 결과로서 패턴이 드러나는 외적 과정을 다루는 것이 창발이다. 안보위협 발생과 관련하여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엔트로피의 증가 과정이 안보위협 발생의 ‘내적 동학’을 다룬다면, 창발의 과정은 안보위협이 생성되어 외적으로 그 패턴을 드러내는 ‘외적 발현’의 과정을 다룬다. 발생한 안보위협의 이슈들이 질적으로 연계되면서 그 성격을 변환시켜나가는 과정이 바로 창발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신흥안보론에서 거론되는 ‘양질전화’와 ‘이슈연계’의 과정은 두 가지 동학, 즉 창발의 동력으로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내적 동학과 창발로 결과로서 ‘패턴(또는 질서)’이 발현하는 외적 동학의 복합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보면, 갈통의 평화론이 주장하는 바처럼,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상태를 좀 더 나은 상태, 즉 ‘적극적 평화’의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불당이 갈통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핵심 논제이기도 하다. 오히려 엔트로피의 증가는 ‘평화가 증가하는 현상’이 아니라 신흥안보의 ‘위협이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본 (신흥)평화란 안보위협 엔트로피의 증가와 안보위협 이슈연계의 창발에 대한 환원적 제어이다. (신흥)평화는 엔트로피를 줄이려는 의도적 메커니즘인 동시에, 다양한 안보위협 이슈들이 예기치 않은 연계의 고리를 형성하며 발현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화는 안보위협 발생과 창발을 줄이려는 환원적 제어, 즉 네거티브 피드백의 과정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흥’과 ‘평화’의 합성어로서 신흥평화는 그 개념 안에 창발과 환원의 ‘모순적 역방향 현상’을 동태적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향상성 유지와 속도조정자의 역할

이상에서 살펴본 창발과 환원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르게 되는, 신흥평화의 최종적 상태는 어떻게 개념화해야 할까? 소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본 ‘질서(order)’는 주로 서구권 평화연구에서 선호하는 개념인데 이를 궁극적으로 지향할 평화의 최종적 상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한 갈통이 지적하고 있듯이, 무엇보다도 불평등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상태를 단지 ‘질서’라는 이름으로 평화를 담보하는 상태라고 상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본 질서를 목표로 설정할 수 없다면, 갈통이 논하고 있는 적극적 평화를 신흥평화가 상징하는 최종적 평화로 상정할 수 있을까? 사실 서구권 평화연구에서도, 특히 평화운동권의 연구에서는 ‘정의(justice)로서의 평화’라는 개념을 선호했는데, 이러한 ‘정의로서의 평화’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과도 통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흥평화는 갈통이 제시하고 있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만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요컨대, 이들 개념은 모두 신흥평화의 최종적 상태에 대한 개념을 채우기에는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신흥평화의 최종적 상태를 이해하는 개념으로서 ‘항상성(homeostasis)’을 제안한다. 항상성의 개념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또는 ‘자기생성(autopoiesis)’의 개념이다. 자기조직화는 거시적 시스템과 그 안의 미시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아래로부터 미시적으로’ 또는 ‘위로부터 거시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진화시켜 간다는 개념이다. 예컨대, 어떤 창발의 메커니즘에 항상성을 지향하는 네거티브 피드백은 전혀 없고, 단지 ‘계속 확대되는 나선형’의 포지티브 피드백만 존재한다면, 이러한 메커니즘은 안보위협이 증폭되는 과정으로 치달을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항상성 유지, 또는 자기조직화 및 자생의 추구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신흥안보의 창발과 평화의 의도적 개입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항상성의 유지를 위한 양방향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평화가 창출된다고 설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항상성 유지의 과정 그 자체를 신흥평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항상성 유지의 과정으로서 신흥평화는 공진화(co-evolution)의 맥락에서 보는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를 의미한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평화를 향해서 시스템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을 달리 표현해 볼 수 있는 개념 중의 하나는 조화(harmony)이다. ‘조화로서의 평화’는 주로 동아시아권에서 선호했던 평화 개념이기도 하다(하영선 편 2002; 안외순 2020). 이러한 조화를 달성하는 메커니즘은 화해(和解), 평화공존(平和共存), 구동존이(求同存異), 화이부동(和而不同) 등과 같은 말이 담고 있는 뜻과 연관되는 바가 크다. 한편, 조화로서의 평화에 대한 논의는, 서구권 평화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기독교적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이 원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사실 여러 면에서 조화의 개념은 신흥평화가 지향하는 최종적 상태와 통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태가 ‘신흥평화가 지향하는 최종적 상태’와 통하는 ‘조화’ 또는 ‘항상성’의 상태일까?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 사이버 평화는 ‘지속적으로 감행되는 사이버 공격이 부재한 상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완전무결하게 사이버 안보에 대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취약점이 있고 그것을 공격하는 악의적 시도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평화는 오히려 사이버 위협은 제거되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는 상태, 특히 사이버 위협이 양질전화-이슈연계-지정학의 임계점을 넘어 창발하지 못하도록 환원적 제어가 꾸준히 부과되는 상태, 그래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유지되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상술했던 사이버 평화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이버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극적 평화로서의 사이버 평화는 갈등의 부재만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분쟁, 범죄, 간첩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모두가 사이버 안보 관련 규범을 공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다층적인 레짐 또는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서 달성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적극적 평화로서 사이버 평화는, i)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ii) 사이버 안보의 모범관행 확산을 통해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

며, iii) 다중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촉진하여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iv) 사이버 안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다원적 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hackelford, et al. 2022, xxiii-xxiv),

이렇게 보면 항상성으로서 신홍평화의 달성 과정을 자기조직화나 자생, 조화 등의 개념에만 의존해서 이해할 수는 없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평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의도적 개입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몸은 대단히 복잡한 항상성의 시스템이지만, 이에 비해 우리 사회는 비(非)항상성의 특징을 지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사회 시스템에서는 엔트로피 증가와 안보위협을 창발을 제어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보위협에 맞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이고 실천적인 개입을 하는, 이른바 ‘속도조정자(pacemaker)’ 또는 ‘유인자(attractor)’의 역할이 필요하다. 속도조정자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네거티브 피드백과 포지티브 피드백이 교차하는 지점에 제도적으로 설계된 존재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페르 박(Per Bak)이 소개하는, 조직화된 무작위, 이웃간 상호작용, 분권적 제어, 메타 피드백(meta-feedback) 등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페르 박 2012).

이 글은 일종의 속도조정자로서 ‘네트워크 국가’의 역할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네트워크 국가의 속도조정자 역할은 밥 제습(Bob Jessop)이 주장하는 메타 거버넌스(meta governance)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Jessop 2003). 메타 거버넌스는 다양한 거버넌스 메커니즘들 사이에서 상대적 균형을 모색함으로써 그들 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관리양식을 의미한다. 메타 거버넌스는 시장의 무정부 질서(anarchy), 국가통제의 위계질서(hierarchy), ‘거버넌스’의 다층질서(heterarchy) 등이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거버넌스의 거버넌스’이다. 다시 말해, 메타 거버넌스는 국가가 사안에 따라 그 개입의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동시에 운용하는 관리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 거버넌스는 평화라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도조정자로서 네트워크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의 핵심을 이룬다.

한편, 신홍평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속도조정자의 의도적 개입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평화를 구성하려는 적극적 노력의 필요성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평화 상태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주관적으로 평화 목표를 구성하려는 노력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홍안보 논의의 ‘안보화(securitization)’ 개념처럼, 신홍평화 논의에서도 평화를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평화화(平和化, peacification)’의 개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잉안보화(hyper-securitization)의 경우처럼, 위장 평화 담론이나 추상적인 평화주의(pacifism) 논의와 같은 과잉 평화화(hyper-peacification)의 위험도 조심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은 신흥안보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차원에서 복잡계 이론의 시각, 특히 창발의 개념을 원용하여 신흥평화의 개념을 탐구하는 시론적 작업을 펼쳐보았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걸맞은 안보 연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평화연구는 여전히 전통적 시각에 머물러 있는, 다소 모순적인 학계의 현실을 타개해 보자는 문제의식의 발로였다. ‘복잡계 안보론’의 지평을 열어간다고 하면서 평화를 보는 시각을 ‘단순계 평화론’의 테두리 안에만 가둬 둘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신흥안보 연구와 짝을 맞추어 신흥평화의 개념화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적 논점들을 살펴보았으며, 창발과 환원의 복합구도에서 새로운 평화 개념을 탐구하는 작업을 펼쳤다. 이러한 개념적 탐구를 통해 이 글은 신흥평화 개념을 보는 시각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신생성’의 관점에서 이해한 신흥평화 연구는 전통안보가 아닌 새로운 분야, 특히 ‘신흥안보 분야의 평화’를 다룬다. 이 시각에서는 새로운 분야의 ‘평화’ 개념이 무엇이나가 쟁점이다. 신흥안보 분야에서도 폭력 논리는 그 형태를 바꾸어 발현되기 때문에 당연히 평화 이슈가 제기된다. 이는 평화 이슈의 다양화를 의미하는데, 최근 사이버 평화, 디지털 평화, 보건·생태평화 등의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이 분야들은 각기 다른 특성이 있어 분야별로 각기 다르게 제기되는 평화의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 향후 신흥평화 연구의 관건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보는 시각에서부터 국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를 모색하는 과정을 평화로 보는 시각이나 좀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인간 존엄과 생명의 보존을 평화로 보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둘째, ‘동태성’의 관점에서 이해한 신흥평화 연구는 ‘정태적 평화’가 아니라 ‘동태적 평화’를 탐구한다. 이 시각에서는 신흥 또는 창발 개념을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쟁점이다. 전통적 시각에서는 폭력-안보-평화의 스펙트럼을 설정하고, 안보는 완전한 평화에는 못 미치지만,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평화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안정의 추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창발의 개념을 도입해서 살펴보면, 평화 자체도 폭력이 완전히 사라진 ‘최종 상태’라기보다는, 여전히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창발해가는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안정적 상태로서의 하이브리드 평화 또는 전쟁-평화의 연속체 등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신흥평화론은 단순계를 배경으로 하여 정태적 상태를 상징했던 전통평화론의 전제를 넘어서 복잡계를 배경으로 한 동태적 과정 또는 ‘동태적 상태’로서의 평화, 즉 동태적 평화의 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항상성’의 관점에서 이해한 신흥평화 연구는 평화의 최종적 상태로서 자기조직화와 ‘항상성’의 유지를 상징한다. 이 시각에서는 ‘신흥’과 ‘평화’ 개념 각각을 살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쟁점이다. 앞서 두 시각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이슈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상적 갈등을 제거하거나 완화하여 기존 질서를 보존하지는 소극적 평화론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신흥평화론은 이보다는 좀 더 나아가 구조적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존 질서를 개혁하는 적극적 평화론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신홍의 개념을 빌어 평화 개념의 지평을 넓힐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한 신홍평화론은 현재 발생한 갈등과 위협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질서를 구축하려는 실천적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의도적 개입을 통한 조화의 회복과 항상성 유지, 그리고 공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의 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현실은 국내 학계에 새로운 안보 연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평화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서보혁 2015; 이상근 2015; 이정우 2018). 물론 이 글에서 살펴본 신홍평화에 대한 논의에까지 평화연구의 지평을 확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전통평화론과 타협하는 적절한 선에서 분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화 개념을 마련하는 데서 그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신홍평화의 개념을 ‘신홍안보에만 국한된 평화’가 아니라 전통안보와 신홍안보 두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시대의 평화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이냐도 쟁점이다. 전통평화 및 신홍안보 이슈가 어떤 점에서 서로 이질적이며, 어떤 점에서 상호통합이 가능한지, 그리고 양자 간의 우선순위를 어떤 조건에서 설정할 수 있을지 등과 같은 논제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필요하다.

여하튼 전통평화의 논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오늘날 현실의 변화가 질적으로 새로운 평화연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평화 개념의 확장을 바탕으로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 글에서 제시한 다양한 개념과 연구 어젠다가 향후 평화연구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볼 때,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신홍평화의 국가전략에 대한 고민도 시급하다. 전통안보 분야의 한반도 평화전략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최근 급속히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신홍안보 분야의 평화전략에 대한 고민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전통안보 분야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처럼, 신홍안보 분야의 ‘한반도 신홍평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병근. 2020. “유럽 지성사와 평화 인식의 기원.” 『한독사회과학논총』, 30집 4호, 139-163.
- 김상배. 2014.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경기: 한울.
- 편. 2016. 『신흥안보의 미래전략: 비전통 안보론을 넘어서』. 서울: 사회평론.
- 편. 2021. 『코로나19와 신흥안보의 세계정치: 팬데믹의 복합지정학』. 서울: 사회평론.
- 신법식 편. 2017. 『한반도 신흥안보의 세계정치: 복합지정학의 시각』. 서울: 사회평론.
- 편. 2019. 『동북아 신흥안보 거버넌스: 복합지정학의 시각』. 서울: 사회평론.
- 리프킨, 제레미. 2015. 『엔트로피』. 경기: 세종연구원.
- 레비, 피에르. 2002. 『집단지성: 사이버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박, 페르. 2012. 『자연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복잡계로 설명하는 자연의 원리』. 경기: 한승.
- 서보혁. 2015. “한국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31집 2호, 115-148.
- 안외순. 2020. “유교사상에 나타난 화해 개념과 전통.” 『동방학』. 43호, 65-95.
- 이동기. 2013. “디터 쟁하스의 평화론: 문명화의 복합구성.” 『오토피아』, 28집 1호, 31-66.
- 이상근. 2015. “안정적 평화 개념과 한반도 적용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9집 1호, 131-155.
- 이정우. 2018. “평화를 향한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의 일고찰: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상에 대한 함의.” 『평화학 연구』. 19집 3호, 7-26.
- 정천구. 2011. “평화의 두 가지 개념에 관한 논쟁: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서석사회과학논총』. 4집 1호, 39-69.
- 존슨, 스티븐. 2004. 『이머전스: 미래와 진화의 열쇠』. 경기: 김영사.
- 하영선 편. 2002.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 김상배 편.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경기: 을유문화사.
- Arquilla, John, and David Ronfeldt. eds. 2001. *Networks and Netwars: The Future of Terror, Crime, and Militancy*. Santa Monica, CA: RAND.
- Bargués-Pedreny, Pol and Elisa Randazzo. 2018. “Hybrid Peace Revisited: an Opportunity for Considering Self-governance?” *Third World Quarterly* 39(8): 1543-1560.
- Beck, Ulrich. 2005. “World Risk Society and the Changing Foundations of Transnational Politics,” in *Complex Sovereignty: Reconstituting Political Autho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edited by Edgar Grande and Louis W. Pauly, 22-47.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Bennett, Andrew. 2013. “The Mother of All isms: Causal Mechanisms and Structured Plur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3): 459-481.
- Bloom, Les, and John E. Savage. 2011. “On Cyber Peace.” *Atlantic Council* (August 2011).
- Boulding, Kenneth E. 1977. “Twelve Friendly Quarrels with Johan Galtung.” *Journal of Peace Research* 14(1): 75-86.
- Buzan, Barry. 1997. “Rethinking Security after the Cold War.” *Cooperation and Conflict* 32(1), 5-28.
- Diehl, Paul F. 2016. “Exploring Peace: Looking beyond War and Negative Pe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0: 1-10.

- Dunne, Tim, Lene Hansen and Colin Wight. 2013. "The E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3): 405-425.
- Flynn, Matthew. 2021. "Winning the Digital War: Cyber Ideology and the Spectrum of Conflict." *Journal of Strategic Security* 14(4): 87-102.
- Galtung, Johan. 1967. *Theories of Peace: A Synthetic Approach to Peace Thinking*, Osl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November 1967).
- , 1987. "Only One Quarrel with Kenneth Boulding." *Journal of Peace Research* 24(2): 199-203.
- ,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 Garcia, Denise. 2018. "Letha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ange: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0: 334-341.
- Heylighen, Francis. 2011. "Conceptions of a Global Brain: An Historical Review." in *Evolution: Cosmic, Biological, and Social*, edited by L.e. Grinin, R.I. Carneiro, A.v. Korotayev, F. Spier, 274-289. Russia: Volgograd: Uchitel Publishing House.
- Jackson, Patrick Thaddeus. 2011. *The Conduct of Inqui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hilosophy of Sci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Worl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Jessop, Bob. 2003.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Cambridge, UK: Polity Press.
- Kupchan, Charles A. 2010. *How Enemies Become Friends: The Sources of Stable Peac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ichmond, Olivier P. 2014. "The Dilemmas of a Hybrid Peace: Negative or Positive?" *Cooperation and Conflict* 50(1): 50-68.
- Roff, Heather. 2016a. "Cybersecurity as a Negative Peace." *New America* (March 2016).
- , 2016b. "Cybersecurity through the Lens of Positive Peace." *New America* (March 2016).
- Senghaas, Dieter. 2013. *Pioneer of Peace and Development Research*, Bremen: Springer.
- Shackelford, Scott J., Frédéric Douzet and Christopher Ankersen. eds. 2022. *Cyber Peace: Charting a Path Toward a Sustainable, Stable, and Secure Cyberspa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Adam. 1776. *The Wealth of Nations*. London: W. Strahan and T. Cadel.
- Teilhard de Chardin, Pierre. 1955/1965. *The Phenomenon of Man*, trans. Bernard Wall, New York: Harper and Row.
- Webel, Charles and Johan Galtung. 2007. *Handbook of Peace and Conflict Studies*. London: Routledge.

Searching for the Concept of Emerging Peace:

The New Horizon of Peace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Emergence

Sangbae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concept of “emerging peace” in order to open a new horizon for peace research. Faced with the challenge of new security threats, represented by “emerging security,” research using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has recently been actively conducted in the security field. However, peace research still remains in the traditional framework. In fact, after the post-Cold War, peace research has not achieved remarkable theoretical innovation and seems somewhat stagnant. As much as in the field of security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onduct new and active research suitable for international changes in the field of peace research.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explores the concept of emerging peace in three dimensions, using the perspective of complexity theory, especially the concept of “emergence.” First, emerging peace means peace related to the “new” field, i.e., the sector of “emerging security”, not traditional security. Second, peace in the emerging security sector is not the concept of peace as a “static state” that traditional peace studies have assumed. Rather it is a concept that should be viewed as peace as a “dynamic process.” Finally, emerging peace should be understood through the concept of “homeostasis” created by the mechanism of self-organization or autopoiesis, an interaction that imposes reductive control over the emergence of security threats. Emerging peace, understood in these three dimensions, is a conceptual setting that focuses on the diversity of “emergence”, which can be said to be a complex and sequential phenomenon that overlaps each other rather than a separate aspect. Attempts to understand this conceptual “trinity” of emerging peace need to be combined with efforts beyond the traditional positivist epistemology developed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in the simple system. In addition, based on these conceptual discussions, it is urgently necessary to consider specific strategies for implementing emerging peace in response to changes in security reality today.

Keywords: Peace Research, Emerging Peace, Emerging Security, Complexity Theory, Emergence
